

한국 개념사 연구의 과제와 문제점

박상섭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 이 글의 목적: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한국 정치 및 사회의 문제를 개념사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논의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성격의, 즉 무엇을 하는 작업인가 하는 점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은 본 필자가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이 발간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개념사총서」 시리즈의 하나인 『국가·주권』 편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직접 부딪히게 된 몇 가지의 실질적인 그리고/또는 이론적 의문점들을 제기하고자 하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성찰은 또한 개념사 연구를 자극하고 또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서양에서 비롯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개념사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선 「한국개념사총서」 시리즈를 통해 기획되고 있는 ‘개념사’ 연구 작업은 방금 지적되었듯이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이루어진 선행 작업에 의해 고무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기초 개념(Geschichtliche Grundbegriffe)」 총서¹⁾와 또한 부분적으로는 영국의 소위 ‘케임브리지 학파’의

1) Otto Brunner, Werner Conze and Reinhart Koselleck, eds. (1972-1997), *Geschichtliche*

작업 결과가 그러한 선행 작업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선행 작업의 의도와 성과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²⁾

이 두 개의 집단 작업의 시작은 서로 별개로 이루어졌지만 '사회사(Sozialgeschichte)³⁾와는 별개의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사상사 또는 이념사의 작업을 이해하던 기존의 역사 연구의 관행에 반대하여, '사회사'의 연구와 이해도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논의의 공통된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사' 연구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개념사 연구를 다루고자 하는 독일의 개념사 연구 그룹의 이론적 입장과 특정 개념의 이해는 반드시 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케임브리지 학파', 특히 스킨너(Q. Skinner) 교수의 강조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발견된다.⁴⁾ 사회적 현상들이 사상이나 이념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역으로 사상이나 이념들이 사회현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나 이념이 구체적, 사회적 현상의 실질적 구성 요소로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에서 논의를 출발한다.⁵⁾ 즉 사회현상은 어떤 주어진 시점/장소에서 지배적인 관념이나 이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을 통해서 포착(捕捉)되고 그러한 한에서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한편

그 개념들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정한 가치체계와 특정한 실천적 관심을 자체 안에 기록하고 있고 현재 이후로의 발전 방향을 정하는 새로운 지평을 제공하기도 한다. 모든 사회현상은 개념과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현상의 올바른 이해는 그것을 지칭하는 개념의 역사적 성격을 통해서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 학계에서 이루어진 그 작업들이 단순히 '순수한', 즉 실천적 관심과 무관한 학술적 작업이라는 각도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관심의 방향과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 두 개의 작업들은 모두 자신들의 삶의 기본틀인 국가 또는 국가와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다양한 사회조직과 사회관념의 역사적 특성, 즉 근대성의 이해를 근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⁶⁾ 독일 『역사적 기초 개념』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정치적 기반 구축에 성공한 (서부)독일이 자신의 정체성을 근대 독일사와의 연속성 속에서 정립하려는 구체적이고 지극히 실천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고, 영국 '케임브리지 학파'의 작업도 유럽 전체의 수준에서 근대성 해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기본적으로 구미인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암묵적이기는 하지만) 미래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

스키너의 경우는 르네상스시기에서 근대 절대주의시기로 넘어가는 서유럽사의 '국가(the state)' 관념의 변화와 관련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⁷⁾ 그는 독일의 개념사 연구자들이 말하는 '사회사적' 변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지만 그가 논의하고 있는 국가 개념의 변화는 16~17세기 사이에 서유럽에서 일어났던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 상응하는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8vols., Stuttgart: Klett-Cotta.

2) 반드시 이 두 개의 그룹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이 그룹들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사 연구 작업에 개괄적인 소개로는 Melvin Richter(1995), *The History of Political and Social Concepts: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를 볼 것.

3) '개념사와의 대조 속에서 이해되는 코젤렉 등에 의해 사용되는 '사회사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사와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회사'와는 달리 사회경제의 구조는 물론이고 정치사도 포함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Reinhart Koselleck (1985), *Futures Past: On the Semantics of Historical Time*, Cambridge: MIT Press, pp.73~91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보완적인 논의로는 Melvin Richter(1995), 앞의 책 2장을 볼 것.

4) M. Richter(1995), 앞의 책, p.133.

5) 이 점에 관해 Anthony Giddens(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353~354에서 대단히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6) M. Richter(1995), 앞의 책, p.52.

7) Quentin Skinner(1978),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2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Q. Skinner(1989), "The State," in Terence Ball, James Farr and Russell L. Hanson (eds.), *Political Innovation and Conceptu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현상이고 그러한 한에서 그가 다루는 이론가들의 논의들의 맥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사’의 방법이 그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치사상의 정치와 역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기본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또는 변화하게 된 상황에 대한 맥락을 중심으로 하는 설명방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⁸⁾

코젤렉을 중심으로 하는 GG 연구팀에서의 관심은 코젤렉에 의해 ‘Sattelzeit’라고 명명된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한 1750~1850년까지의 100년간의 시기에 있어 독일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독일에서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가체제의 완성과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 작업의 성공적 추진, 이에 따른 국가 이데올로기의 강화,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이루어진 봉건체제의 붕괴 과정, 국가와 구분되는, 따라서 서유럽과는 다른 시민사회 개념의 등장 등 영국과 프랑스에 비할 때 지체되었지만 뒤에 압축된 시간 속에서 급속히 이루어진 근대화의 과정을 개념사의 변화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정체성의 확인 작업은 반드시 구미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즉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의 이해와 자아상의 확립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작업으로 여겨진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인들과 수세적 자세에서 접축을 시작한 지 짧게는 반 세기, 길게는 한 세기 반 만에 유럽식 근대질서를 상당한 정도에서 성공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현대의 세계정치 속에서 더 이상 수세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권력 조직의 틀로서 서양식 근대국가체제를 빠르게 구축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외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군사체제와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행정제도와 경제적 하부구조의 구축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한다. 이러한 일들은 내부적으로 국민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근대화라는 개념으로 요약하여 지칭하고 이해하고 있다. 물론 동아시아 삼국에서 이러한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서로 상당히 달랐지만 그래도 유럽 외부 지역에서 (북미 지역은 유럽의 연장으로서 이해할 때) 이러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행한 첫 번째 경우로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적 경험, 즉 유럽보다 더 긴 국가생활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듯이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각 국가 내부에서 발생한 사회변동은 혁명이나 전쟁과 같은 대규모의 폭력사태를 동반했고 또한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의 변화도 그에 못지않은 폭력 과정을 수반하였다. 특히 근대화 시기의 차이라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국력의 격차에서 비롯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침탈과 미·소 사이의 냉전에 동아시아 지역이 연루되면서 발생한 이데올로기적/군사적 적대관계의 형성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사는 항상 위험을 수반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내부문제가 대체로 정리되고 국제관계도 유럽적인 주권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재편되는 한편 성공적 근대화 작업의 결과로 대외공격적 자세가 완화되면서 동아시아 각국은 이제 이러한 변화가 갖는 역사적 의미와 그 변화에 입각한 새로운 정체성의 확인 작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구미에서 창안된 개념사적 문제의식이나 연구 수행방법은 단순한 시사점 제공 이상의 통찰을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동아시아의 ‘성공담(成功談)’은 서양식 근대제도의 ‘성공적’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작업은 그러한 ‘성공’을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용의 배경과 과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필요한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8) M. Richter(1997), “Appreciating a Contemporary Classic: The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and Future Scholarship,” *Finnish Yearbook of Political Thought*, Vol.1, pp.30~31.

요컨대 ‘개념사’라는 관점을 채택하여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동아시아 또는 개별 국가들에 있어서 서양식 근대제도 수용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도는 구체적으로 정치권력의 형성, 행사 및 견제에 관련된 정치제도 및 그와 관련한 사회적/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서양에서 먼저 만들어진 근대식 정치/사회제도의 전파와 수용인바, 여기에서 제도를 말할 때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단순히 제도의 외양적인 틀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작동시키는 운영 체계(operating system)로서의 특정한 문화(윤리의식, 가치관, 사유방식 등)의 전파와 수용, 그리고 전파 측과 피전파 측 문화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이다.⁹⁾

우리에게는 특히 이 상호작용의 문제가 큰 관심사가 된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비록 서양식 근대화라는 점에서는 낙후되었고 서양으로부터 많은 점을 배웠으나 동아시아의 전통문화는 서양문화에 뒤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갖추고 있고 또한 이 부분은 근대화를 추구하는 동아시아인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강력한 준거틀로서 작용함으로써 서양식제도가 일방적으로 채택되었다기보다는 전통 요소와 상호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상호작용은 우선 많은 경우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사유/가치 체계와 외래 체계 사이의 충돌(衝突)로 표출되었다. 또한 서양문명의 수용, 일방적으로 전통문화의 코드를 바탕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굴절(屈折)됨으로써 수용된 서양문명은 이미 원래의 서양문명 그 자체와는 일정한 거리를 갖는 동아시아 자신의 독자적 문명의 일부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충돌과 굴절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전파자로서의 서양문명과 피전파자로서의 동아시아 문명 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이 동아시아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개념사적’ 검토 작업의 중심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전파, 수용 및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작업을 위해 우리는 유럽에서 이루어진 개념사 연구의 선행 작업의 연구 성과에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문화의 주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다양한 개념들을 그 형성의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맥락 속에 위치시켜 놓고 그 의미의 변화를 정치/사회 구조의 변환에 연결시켜 이해하는 작업 방식은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화’ 과정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실질적인 문제 또는 주제는 서양사의 경험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의 가장 큰 요인은, 당연한 것이지만 근대 이후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적인 정치/사회제도 및 관념/의식과 근대적인 것 사이의 급격한 단절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그 차이는 개념사의 연구방법,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아도 그 방법의 구체적 적용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유연성의 발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동아시아 내지는 개별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열거하면서 논의를 지속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한국 역사의 특수성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사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근대 인식과 경험이 모두 서양의 충격에서 비롯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발견한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장구한 문명의 역사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져왔다. 유럽에 비해 더 길었고 또한 중단되지 않았던 국가 생활의 역사나 기독교보다 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유교나 불교 같은 철학/종교를 그 단적인 예로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자부

9) 여기에서 사용되는 제도의 의미는 Peter L. Berger and Thomas Luckmann(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에서 사용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

심을 갖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양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해야만 했던 수모는 이것이 단순히 일회적인 군사적 수모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조직화라는 측면에서의 총체적 낙후성의 표면적 징후로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중국을 필두로 일본에서 다음으로는 조선에서도 그러한 낙후성의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서양 사정에 대한 연구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했던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¹⁰⁾ 또한, 그 성공 정도나 여부 또는 추진 속도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였지만, 여하튼 서양을 따라잡거나 아니면 서양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의 마련을 위한 정치개혁 내지는 제도개혁의 작업도 시도되었다. 서양의 동아시아 진출의 시기를 19세기 중반으로 본다면 이제 한 세기 반 만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근대화 작업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개념사적 접근법을 통해 검토해야 할 시기는 개별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체로 1850~2000년간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뒤늦게 근대화를 경험한 독일에 비해서도 최소한 한 세기 이상 더 지연되었다.

동아시아 전체 또는 개별 국가별로 이러한 변동을 검토할 때 우리는 시기 뿐 아니라 다른 몇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서양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양 개념사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방법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차이로 인해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인 연구 프로그램의 작성에 앞서 우리는 우선 전체로서의 동아시아 사회가 유럽 사회와 다른 역사적 특성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중국의 경우 위원(魏源), 일본의 경우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를 대표적 인물로 들 수 있고 조선의 경우 유길준(俞吉濬)을 대표적 인물로 언급할 수 있겠다.

1) 서양에 비해 더 안정된 정치체제의 완성과 이에 따른 약한 군사적 요소

서양의 근대국가체제의 중심 사항인 근대국가는 고대의 보편적 정치질서를 제공했던 로마제국의 붕괴 이후 나타난 봉건제라고 부르는 임시변통적으로 구축된 질서가 자연스럽게 발전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즉 대단히 임시적이었고 따라서 무력갈등의 요소를 항상 표면 위에 노출시키고 있었던 이 봉건제는 지역할거적인 봉건 세력들 사이의 지속적인 무력대결을 통해 점차 보다 큰 정치단위로 통합되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보다 큰 정치 단위를 우리는 근대국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 근대국가들은 비록 소규모의 봉건제적 정치조직을 극복하고 통합한 결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체제는 봉건제적 특성을 그대로 간직했고 드러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서는 지속적인 군사 활동의 경향과 이것을 위한 준비 작업에서 찾을 수 있다.¹¹⁾ 이러한 군사 활동은 대내적으로는 통합에 반대하는 구봉건귀족 세력에 대한 억압 활동과 대외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다른 근대국가들과의 지속적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서유럽에 비해 보다 큰 안정성과 지속성을 누렸던 동아시아-중국 적 천하질서는 대내적·대외적인 관계에서 군사적 경쟁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백 년에 한 번씩 있었던 왕조 교체 시기에만 조직적 무력활동이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정성이 깨진 것은 19세기 중반 서양이 도래한 이후의 일이었다.

11) 이러한 관점에서 근대국가의 역사적 특성을 다룬 대표적 논의로는 Perry Anderson (1974),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 London: New Left Books를 볼 것.

2) 서양식 혁명기의 부재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무력 대결을 전제로 한 서양의 독특한 정치체제는 주권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상시 경쟁체제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각 국가들은 이러한 경쟁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 견딜 수 있는 내부체제를 갖추어야만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배체제를 일원화하고 이것을 관장하는 효과적인 행정조직으로서의 근대식 관료체제를 만드는 한편 영역 내의 경제를 진작시켜 전쟁활동에 필요한 물적 조건을 갖추는 노력에 진력하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소위 절대주의체제의 완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요약되는데 이러한 경제 활성화 노력의 결과 당시까지 지배의 수동적 요소로만 여겨지던 시민사회를 정치적으로 자극하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근대 시민혁명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비해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무력활동을 위해 시민사회를 키우고 수취하는 과정을 갖지 않은 결과 동아시아 사회는 전통적 형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서양에 비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고 시민사회의 자생적인 역동성에 입각한 정치/사회적 혁명을 경험하지 않았다.

3) 서양 문물의 전래와 번역의 작업을 통한 서양적 관념의 수용

동양사회가 서양적인 의미의 근대성과 혁명을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은 상당 기간의 전쟁과 그것의 정당화 작업에 익숙한 서양문화의 전래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서양의 전래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순수한 것은 아니었고 많은 경우 정치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침탈의 성격을 띠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이에 맞서 처음에는 저항했으나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고서 서양과의 장기적 대결을 위한 준비로서 바로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첫 단계로서 서양의 정치/사회제도를 토착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국가의 경우는 이미 동아시아 사회도 갖고 있던 제도이면서 개념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국가의 구성 원리와 관련된 자유, 인권, 사회 등의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서 동양과 서양 사회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 주는 상징적 사항들로서 여겨진다. 당시까지 그러한 관념이 없었던 까닭에 이름도 갖추지 못하던 상황에서 자신들이 보유하는 어휘를 바탕으로 의미가 통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노력을 시도하였다.¹²⁾

3. 동아시아의 '근대화'의 특수성: 서양문화와의 상호작용

유럽에서 발전된 두 개의 '개념사' 연구의 경향은 서로 나름대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이 기본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변화는 고대 로마제국의 보편적 정치질서가 붕괴된 이후 나타난 봉건제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이다. 따라서 이들이 갖는 관심대상으로서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자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 선형적인 모습을 띤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상기 서유럽의 경험에서 보이는 '개념사' 방식의 연구를 자극하고 또한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변화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전체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개념사' 관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관찰될 수 있는 대부분의 동아시아의 변화는 자생적이었다기보다는 서유럽의 충격에서 비롯되었다. 이 점은 시간의 선후보다 더 중요한 차이로 여겨진다. 따라서 동아시아 전체 또는 개별 국가사의

12) 19세기 말 서양에서 들어온 여러 개념들의 번역어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본 학자들의 고민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연구로는 야나부 아키라(2003), 『번역어 성립사정』, 서혜영 역, 일빛;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임성모 역, 이산을 볼 것. 중국에서 이와 관련한 작업으로는 페데리코 마시니(2005),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이정재 역, 소명출판을 볼 것. 철학 및 사상 분야에 관련된 일본어 번역어의 총람으로는 石塚正英·柴田隆行, 2003, 『哲學·思想翻譯語事典』, 東京: 論創社를 참조할 것.

문제를 개념사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할 때 서유럽의 충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또는 전파된 서양문명과 피전파자로서의 동아시아 문명 사이에 이루어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관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우선 그러한 상호작용의 패턴 또는 유형을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충돌(衝突)]

우선 생각될 수 있는 상호작용으로는 충돌을 들 수 있다. 즉 새롭게 전래된 문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 거부와 그러한 거부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사이의 상호작용은 충돌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충돌은 무한정으로 지속될 수 없고 바로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다. 실제 이러한 충돌은 단순한 개념상의 충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들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힘의 충돌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항상 정치적/군사적 형태의 승패로 결과하게 된다. 패자는 결국 승자의 '개념'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정은 구체적으로 승자의 개념의 이해와 수용을 위한 연구 작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승자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는 승자의 의도와 요구사항을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예로서 중국에 의한 유럽식 국제질서 관념, 즉 만국공법의 수용을 들 수 있다.¹³⁾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서유럽 문명의 전파는 일차적으로 서유럽 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유럽식 국제관계 관념에 입각한 교섭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소극적 반응에 따라 개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뒤따랐고 이와 동반하여 서유럽적 국제정치 질서의 독특한 관념의 소개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군사적 압박은 엄청난 저항을 야기하였지만

저항이 큰 효과도 없고 또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 인식될 때쯤 되어 국제법(國際法)-만국공법(萬國公法)의 텍스트가 소개되고 학습되기 시작하였다.

서양식 만국공법이 중국인들에 의해 학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자신이 천하의 중심을 이룬다고 믿어왔던 중국인들의 전통적 천하관 또는 세계질서관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국공법 또는 서양식 근대 국제법체제의 전래와 수용의 문제는 단순한 학술적 개념의 전파문제를 넘어서는 문명 사이의 충돌 과정에 대한 대단히 생생한 실례(實例)로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만국공법의 관념이 중국을 거쳐 조선에 소개될 때의 과정은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중국은 자신들이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전통적/위계적 세계질서관을 포기하던 것과는 달리 조선에 대한 전통적 상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조선도 그러한 것을 바로 요구하지 않으려 했다. 어차피 국제질서에 관련된 규범이나 원칙의 효력은 힘의 현실적 관계에 의해 지지되지 않으면 무력한 정치적 이상으로 그치기 때문이다. 주권평등이라는 서양식 국제 관계의 관념을 조선과 중국 관계에 적용한다는 것은 전통적 관계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만한 힘이나 주변의 도움을 조선은 갖고 있지 못했다. 조선의 지식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였고 따라서 조선이 주권평등의 원칙으로 구성된 근대식 국제질서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사실상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여 중국과의 전통적인 사대자소(事大字小)의 관계는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제한 조건을 인정하는 것은 근대식 질서로의 편입에 대한 열망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⁴⁾

13)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이 주관하는 「한국개념사총서」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김용구, 2008, 『만국공법』, 도서출판 소화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연구이다.

14) 조선인들이 그러한 열망에 대한 현실적 제약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김윤식(金允植)의 兩便論/兩得論과 유길준(俞吉濬)의 兩截體制論에서 잘 드러난다. 이 점에 대한 간략한 논의로는 박상섭, 2008, 『국가·주권』, 도서출판 소화, 224~233쪽을 볼 것.

정치영역에서의 새로운 개념이 현실에 대한 유효한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상의 변화가 선행 또는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비현실적이지만 그러한 개념이 생겨났다는 사실은 개념이 단순히 현실에 대한 수동적 반영에 불과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미래의 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적극적 의미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중첩(重疊)]

주권평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서양식 국제 관계의 전래와 수용이 단순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제도 표면만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서양에서 그러한 국제 관계가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하기까지 있었던 모든 갈등과 투쟁의 내용들이, 수용국의 인지(認知) 및 의지(意志) 여부를 떠나,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토를 기초로 하는 권력 조직으로 의미하는 국가 자체의 역사적 변화와 그에 따른 국가 개념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관념의 권력 관계의 전래와 수용이다.

이때의 '새로운 관념의 권력 관계'란 중세까지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합쳐진 국가 관념(respublica/commonwealth)을 대체하는 마키아벨리(N. Machiavelli)와 홉스(T. Hobbes)의 권력 및 국가(stato/state)의 개념을 말하는데 이 개념도 단순히 국가 그 자체에 대한 관념뿐 아니라 그 구성단위로서의 개인에 대한 강조 등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관 및 사회관을 수반 또는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의 동아시아 전래는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번역을 통해 시작되었고 이 번역 작업은 단순한 단어의 창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념 또는 개념의 학습 나아가서는 관련된 제도의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최소한 동아시아 또는 개별 국가 안에서 이미 양해되고 있는 기성의 단어들을 조합하여 피전파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의미 체계와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들을 만

들면서 그것들로 지칭되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단순한 국제 관계의 관념 사이의 갈등보다 더 심한 갈등이 인간과 사회에 관한 동서양의 원리들 사이에 내재되고 있다. 이 문제들과 관련된 특정한 이론 또는 사상의 본래의 형태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주어진 시점에 있어서의 국가인데, 이 국가 권력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사상/이론이 원래의 모습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이들 새로운 현상과 관념들의 수용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려고 하였다.

19세기 이후 중국과 일본으로 전래된 서양의 근대적 인문·사회 분야의 개념들은, 근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사실상 전부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가장 중심적인 개념인 국가의 경우는 예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서양의 'the state'는 전래되면서 바로 국가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그 구성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나, 동아시아 사회가 그 역사적 깊이나 제도적 세련도 또는 철학적 정당화라는 점에 있어서 유럽에 못지않은 국가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서유럽에서 'the state'로 지칭되는 개념이 근세 초부터 중요한 문제로 되었던 것은 유럽이 보편적 국가의 현상이 결여했던 것으로 이해되는 봉건체제를 경험했고 이 봉건체제가 중앙집권적 절대주의체제를 통해 극복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갈등과 투쟁을 경험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무엇보다도 효과적이고 안정된 중앙집권적 국가질서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근대국가의 정치이론이 'the state'의 개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면서 'the state'의 개념은 기존의 'respublica(commonwealth)'의 개념을 대체하는 지극히 근대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¹⁵⁾

15) 이에 관해서는 박상섭, 2008, 앞의 책, 28~64쪽을 볼 것.

근대 국제 관계의 핵심 요소인 'the state'가 동아시아에 전래되면서 국가라는 번역어를 찾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나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서양어의 'the state'를 국가로 한 것은 메이지 초기의 지식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중국에서 진한(秦漢) 시기에 이르면 국가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천하통일의 상징인 황제, 즉 천자나 황제를 정점초기의 지식관료적 관리 기구를 의미하였다는 점을 잘 알았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the state'를 바로 국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¹⁶⁾

동아시아권에서 국가라는 말로 번역되는 서양어에도 사실상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공동체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의 polis/civitas/respublica/commonwealth가 그 하나이고, 보다 근대적인 'the state'가 다른 하나이다. 서양에서 전자의 개념이 뒤로 물러나고 후자의 state가 전면에서 서는 과정은 바로 근대 이후 서양 정치사의 독특한 발전을 반영하는 것인데 서양의 근대적 국가 개념이 소개되기 이전까지의 동아시아에서도 전자의 국가 개념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흥미 있는 일은 서양에서 후자의 지배기구를 칭하는 근대적 국가의 개념이 토마스 홉스에서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진 이후 국가는 다시 공동체 주민 전체와의 연결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유기체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아직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지향해야 할 정치적 목표로서 삼고 있던 독일에서 민족주의 정치운동의 일환으로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스위스/독일 법학자 블룬칠리(J. C. Bluntschli)에 의해 보다 완성된 형태로 제시된 유기체설에 입각한 국가이론이 서양에서 출현한 다양한 국가이론을 제치고 동아시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서양의 국가 이론으로 소개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이론들 가운데 일부가 선택적으로 수용된 것은 원래의 이론과 수용국의 전통적 관념 사이에 존재하는 친화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블룬칠리가 일본에서 처음 소개된 것은 독일의 국가이론에서 국가가 형이상학적으로 지지되는 윤리적 실체로서 고양되고 있었던 점이 권위주의적 군주제와 쉽게 접합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¹⁷⁾

일본에 소개된 블룬칠리를 다시 중국에 소개한 량치차오(梁啟超)의 경우는 일본에 전래된 이유와는 약간 달리 블룬칠리에서 강조되고 있는 유기체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인들이 단일 개체 국민으로서의 일체의식을, 즉 서양의 민족의식에 가까운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정치적 신조는 조선의 경우 丹齋 신채호(申采浩)에 의해서 공감되었는데 단재의 관심도 일본의 조선반도 강점사태에 저항하는 이념의 기반으로 유기체로서의 국가 정신의 주체로 규정되는 민족(民族)에 맞추어져 있었다.

[신조(新造)]

19세기 말 동아시아에 국가의 개념이 서양을 통해 새롭게 전래되었지만 이미 지적되었듯이 국가는 동아시아 국가에도 익숙한 개념이었다. 그럼에도 굳이 서양을 통해 새롭게 전래된 것같이 여겨진 것은 그것이 단일 개체로서의 일체의식을 강조하는 민족의 개념과 붙어서 소개되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독일어 Volk 또는 Nation의 번역어로서의 민족의 개념은 동아시아에서는 사실상 전혀 새로운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개념은 신조어(新造語)로 취급될 수 있다.¹⁸⁾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정치학/사회학적 개념들은 신조어였다. 예컨대 자

16) 小倉芳彦, 1978, 『逆流と順流: わたしの中國文化論』, 研文出版, 45~46쪽; 이시다 다케시(2003), 『일본의 사회과학』, 한영혜 역, 도서출판 소화, 35쪽에서 인용.

17) 박상섭, 2008, 앞의 책, 82~88쪽, 155~163쪽을 볼 것.

18) 물론 이러한 민족의 개념이 바로 수용되어 정치운동의 중심적 구호가 될 수 있었던 동아시아의 정치적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대적 정치운동의 주체로서의 민족의 개념은 서양에서 전래되었거나 서양의 충격을 받아 새롭게 규정되었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 점에 관해서는 앙드레 슈미트(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정여울 역, 휴머니스트 참조.

유, 인권, 사회 등의 개념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단어들로 지칭되는 현상들이 동아시아 사회에 전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현상들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그러한 현상들이 중요한 사회적 실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양의 질서가 복합체로서 전래되면서 이러한 모든 현상들에 대해 번역이라는 형식을 통해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기 시작하였는데 기왕의 재래적 어휘집을 바탕으로 의미가 통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양의 제도들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재래적인 어휘집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들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서양의 제도나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관념들은 재래적 관념과 일정한 타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상황의 특수성]

앞의 3.에서 우리는 서양문화의 자극에 따른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반응의 문제를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그러한 일반론이 한국만을 좁혀 관찰할 때 과연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와 관련된 서양의 개념 전래는 중국에 비해 정치적으로 훨씬 더 폐쇄적이었음은 서양 기독교의 전래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기성 질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서양의 제도와 개념들이 소개되었고 이것의 대중적 유포도 대단히 제한되었다. 가장 초기에 소개된 것으로는 유길준(俞吉潁)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으로서 그는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西洋事情)』을 바탕으로 서양의 문물을 조선에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저서를 저술했고, 특히 서양식 만국공법(萬國公法)에 입각한 주권평등의 이론을 조선과 중국과의 특수한 사정에 적용하려는 ‘양질체제

(兩截體制)’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⁹⁾

그리고 조선인으로는 처음으로 다양한 정치체제의 존재를 글로 발표함으로써 대안적인 정치체제의 가능성을 언급하여 서양적 정치사상의 일단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의 개화와 부강이라는 실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국가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서양 국가가 형성/강화되던 역사과정의 문제에 대해 무지한 탓으로 실제의 복잡한 역사 과정이 추상된 이후 남은 국가라는 텍스트만이 전달되었다. 따라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국가라는 단어는 서양식 근대국가의 개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²⁰⁾

유길준 다음으로 나타난 국가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당시 겪고 있던 자신들의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 제시된 것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적하는 전통적인 국가 개념의 반복이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막 출현하기 시작한 정치학 또는 법학 교과서에서의 번역·소개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주어졌던 정치 현실의 설명과 대안의 제시를 위한 논의로서 아마도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작업으로서는 단재 신채호의 작업을 들 수 있을 것이다.²¹⁾

근대국가의 의미를 개념화할 수 있는 이론적 전통을 갖지 못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조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누구도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독창적인 대안의 국가 개념을 제시할 수 없었고, 이러한 점은 신채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그도 국가와 가족을 동일시하는 전통적인 국가의 관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그는 이 개념을 서양에서 전래된 대가족으로서의 국가 관념과 연결시키고 나아가서는 ‘민족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로서의 국가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유럽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진화론을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살아남는 전략으로서

19) 박상섭, 2008, 앞의 책, 228~233쪽.

20) 박상섭, 2008, 앞의 책, 138~142쪽.

21) 박상섭, 2008, 앞의 책, 166~174쪽.

부국강병화(富國強兵化)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신채호의 이러한 논의는 물론 중국의 량치차오에 의해 소개된 불륜칠리의 학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용이 우연이 아니라 자신의 정확한 실천 방향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개념사적 연구 시각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신채호를 통해서 한국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관념이 최초로 수용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국가의 구성원 전체를 민족이라는 분명한 개념을 통해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하려 시도한 점도 대단히 독창적인 시도였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²²⁾ 신채호 이후의 정치담론은 조선의 국가 종언과 함께 더 이상 공개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국가를 포함하는 정치문제 전반에 걸친 논의는 1945년 광복과 함께 비로소 재개될 수 있었다.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식민 통치 기간에는 일본식 교육체제 하에 확립된 서양식 법학교육의 틀 속에서 정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토론되었기 때문에 그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라는 맥락을 추론하는 개념사적 방법에 입각한 작업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풍부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을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과 위치에 대한 주체적인 규정을 위해 개념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안정화를 위해 교과서를 통해 현실과 괴리된 개념들이 주입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독립을 조장할 수 있는 여하한 논의도, 정치적으로 탄압되던 상황에서 허용되던 논의도 법학교육의 교과서를 통한 주어진 국법질서의 정당화였는데 이러한 교육은 1904년의 을사보호조약 후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 5년 사이에 공무원 임용고시 준비용으로 간행된 각종 법학통론 또는 헌법학의 교과서들을 통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²³⁾ 국권이 완전히 상실되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상황이 중심적 사

회교육의 양상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권상실기의 모습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까지 간략하게 보았듯이 한국에서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양의 정치/사회 개념의 전래와 수용은 상당 기간 동안의 거부 뒤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과 일본에서 이미 수용된 것을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여과의 과정 없이) 재수용하였고 그나마도 국권상실로 독자적인 수용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앞에서 시도된 동아시아에서의 서양적 정치/사회 개념의 수용과 관련된 몇 개의 일반론적 논지도 한국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변화 및 추세의 이해를 위하여

‘개념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변화 모습을 연구할 때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어려움을 주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험하게 된 구조적 변화들이 정치/사회 문제에 관련된 개념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중국의 경우는 공산혁명을 성공적으로 경험했고 일본은 패전을 계기로, 타율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타협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전통적 권위주의를 벗어나 서양식 민주주의체제 수립에 상대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는 분단과 함께 후원국의 정치체제를 도입하고 그것에 합당한 정치/사회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물론 이러한 점들을 말할 때 본 필자가 염두에 두는 것은 사회사 또는 실재사 그 자체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정치/사회적 발전 전략을 수립

22) 박상섭, 2008, 앞의 책, 173쪽.

23) 김효전, 1996, 『서양헌법이론의 수용』, 철학과현실사, 449쪽. 이 당시 발간되었던 교과서

에 관한 자세한 소개는 김효전, 2009, 『헌법』, 도서출판 소화, 97~117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주체들이 자기인식을 위해 개발 또는 차용했던 정치/사회의 제반 문제에 관련한 개념들이다. 모든 정치/사회의 제도들은 그것을 낳게 한 대단히 특수한 맥락이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또는 대단히 특수한 가치관, 이념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서의 서양제도의 도입은 원래 제도가 만들어질 때의 구체적인 맥락과 가치관/이념 등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 적지 않다. 따라서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된 이념을 바탕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였으나 그러한 이념들은 나름대로 일정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이념들은 정치/사회문제에 관련된 독특한 형태의 개념들을 만들어 내게 되었는데 바로 그 독특한 모습을 정확히 그려내는 일이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남한) 사회의 변화 모습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한국 상황을 규정한 가장 큰 사건은 미·소대결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분단이였다. 따라서 그 분단은 이데올로기적 대결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남북 양 지역에서 수립된 정치체제는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일당독재체제였다. 이러한 체제는 남북한 공히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발전단계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국제정치의 역학 관계에 의해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이었다.

남한에 국한해서 볼 때, 자유선거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그 체제가 원래 발전한 고장에서의 정치적 또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한 것이었다. 또한 원래의 이념대로 그 체제가 작동한 것도 아니었다. 선거 때마다 부정의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모든 정치적 결정은 항상 독재, 권위주의와 관련된 시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 체제는 국제정치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 한국 내의 정치학은 현실세계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설명/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 또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원론적인 정당화로 일관하였다.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권위주의 정치현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옹호론이 정치적으로 어색해지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장차 달성해야 될 정치 이상으로서 그 지위가 바뀌고 대신 안보와 급속한 경제성장/근대화의 논거 위에서 권위주의의 불가피성론이 제기되었다. 또한 토착적 정치체제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는 '외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도 시도되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자체는 모든 정치적 주장과 교과서에서 최고의 정치규범으로서의 지위를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었다.²⁴⁾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문제는 단순히 그 이념적 가치가 현실 정치 속에서 얼마나 존중되었던가 하는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위선'으로나마 자유민주주의가 고집되어야만 했던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독특한 풍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은 현대 한국의 독특한 정치 풍토 또는 지적 풍토를 이해하는 하나의 키(key)로서 취급될 수 있다. 우리의 논의의 기본 관심사인 '개념사적'인 접근방법과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 도입된 후 사람들에 의해 채택되어 주요한 모든 정치 논쟁의 중심 주제가 된 상황에 대한 맥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독특한 지적 풍토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전후 한국 사회의 지적 풍토를 이해하는 작업은 그것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몇 개의 정치적/사회적 개념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고 아직 구체적인 어떤 결론을 내릴 만한 실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단정적인 성격 규정은 불가능하지만 연구 진행의 전략을 구성하기 위해 가설적인 예비 명제를 제

24) 1980년대까지 한국정치의 권위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계속적으로 정부와 반정부 인사들 모두에 의해 고집될 수밖에 없었던 독특한 상황에 관한 논의로는 박상섭, 1986, 「한국정치와 자유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와 국가』, 법문사를 참조할 것.

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가설은 구체적인 연구 결과 후에 상당히 수정될 필요가 있겠지만 연구 수행을 위한 임시적 안내표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만을 두고 볼 때 한국에서의 중요한 정치학/사회학의 개념은 현실의 설명을 위해, 또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한 분석도구로서의 기능보다는 현실과의 정합성(整合性) 또는 사회적 적실성(適實性) 여부/정도에 대한 큰 고려 없이 어떤 정치적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비판을 위해 사용되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이러한 경향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일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급격한 민주화는 그러한 경향의 좋은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은 정치 또는 사회가 움직이는 현실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또 다른 경향을 낳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르는 원리적 논쟁으로 이어지게 한다. 따라서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의 대부분은 원리주의(原理主義, fundamentalism)의 색채를 띠게 한다. 이러한 원리주의의 풍토는 반드시 전후의 한국 사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조선시대의 성리학(性理學)이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전후의 정치적 이념 논쟁뿐 아니라 종교 이념의 경우에도 그러한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가설적으로 원리주의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의 이념들이 자신의 현실생활에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이미 완성된 형태로, 즉 투명성이 상실되어 그 원리에 대한 어떤 수정도 용납될 수 없는 형태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²⁵⁾ 그러나 이 점은 결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양한 지적 조류나 주요한 개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 또는 반증 및

25) 여기에서 사용된 '투명성'의 의미는 Peter L. Berger and Thomas Luckmann(1966), 앞의 책, p.59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이 책에서 (불)투명성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해지는 지식의 성격으로 논의되고 있다.

수정되어야 할 가설이라는 점이 명백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어

개념사의 시각에서 정치/사회 변화 연구가 갖는 가장 큰 이점은 정치/사회에 관련된 기본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또한 변화된 상황에 대한 맥락을 중심으로 하는 설명 방식을 통해 정치/사회 전반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서는 세부적인 연구방법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나 문명권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원론적 연구방법을 동아시아 전체 또는 개별 국가들의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적용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역사의 극적 변화는 유럽에 비해 1세기 이상 늦은 시기에 겪게 되었고 또한 유럽의 충격의 결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개념사적 접근은 주로 동서양 문화의 상호작용 과정을 추적하는 형태로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중국과 일본과는 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과 일본에서 서양문화의 전래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때 일본 식민통치를 경험했고 따라서 중국과 일본에서 경험한 주체적, 지적 대응 과정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은 또 다른 문제를 안겨주었다. 즉 사회적 현실과 거리가 있는 정치/사회체제를 채택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화 작업이 지적 활동의 많은 부분을 이루었다. 따라서 유럽에서 개념사 연구가 제안될 때 상정되고 있었던 전제 사항들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개념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한국에서는 그대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보다는 현실과 어느 정도 괴리된 정치/사회의 개

념들이 국제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외부적으로 부과되고 이것이 교육되고 주장되고 반박되는 사이에 사회사/실재사와는 꼭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 정착하게 되고²⁶⁾ 이것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은 당연히 경험적 연구에 의해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결어의 주장은 아직은 필자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유럽에서 발전된 개념사 연구방법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필자의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실은 개념사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의 결과에서 나온 중요한 결론으로 볼 수 있다. 연구될 개별 사회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접근방법에서 상당한 수정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연구 자체는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용 과정에서 적절한 수정이 가해지면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대단히 바람직한 학문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본 필자의 결론적 주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6) 이 점은 앞서 언급된 박상섭, 1986, 앞의 논문(주 21)에서 지적하고자 한 기본 주제였다.